



2011년 신년사설을 통해 본 북한경제 전망

홍익표 국제개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iphong@kiep.go.kr, Tel: 3460-1041)

1. 2011년 북한 신년사설 개요
2. 2010년 북한경제 평가
3. 2011년 북한경제정책의 특징
4. 2011년 북한경제 전망

주요 내용

- ▶ 북한은 2011년 1월 1일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라는 제목의 신년사설을 발표하였음.
- ▶ 2011년 북한경제의 목표는 후계체제의 조기 안정과 2012년 경제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후계자를 공식화한 북으로는 2012년까지 인민경제생활 향상과 대외경제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011년 북한경제정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증대임.
 - 둘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정책적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됨.
 - 셋째, 철강·화학·기계공업 등 일부 핵심 산업의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넷째,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특히 북·중 경협 확대임.
- ▶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011년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 우선 거시경제 성장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보다 훨씬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저성장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경공업과 농업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 효과는 선군정치 및 선군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망됨.
 - 북한 당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최근 들어 외자유치와 대외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 효과도 개발에 필요한 자체 자원부족 및 인력양성 한계,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1. 2011년 북한 신년사설 개요

- 북한은 2011년 1월 1일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 형태로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발표하였음.
- 과거 발표된 신년사설의 제목들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정치적인 목표들을 제시한 반면, 올해 신년사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부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 경제부문의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음.

표 1. 최근 북한 신년사설 제목

연도	신년사설 제목
2011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2010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2009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2008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2007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2006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 인민생활 향상이 2011년 최우선 경제목표로 제시된 것은 역시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겠다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 당국은 경제상황 개선의 효과를 주민들이 실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쳐 1998년부터 강성대국 건설노선을 제시하였지만 북측의 식량과 생필품 부족현상은 계속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4대 선행부문의 정상화에 주력하였지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문의 정상화가 자신들의 실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음.
- 따라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노선과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민생

활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신년사설을 통해 2010년을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 보게 하는 경이적 사변들이 다계단(여러 단계)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라고 주장함.)
- 북한이 2010년의 성과 중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식화’와 당 조직의 정비임.
- 북한은 지난해 9월에 개최된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3남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위원으로 선출하여, 후계체제를 공식화하였음.
- 신년사에서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정치적 열의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 속에 소집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 권위를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하였음.
- 경제분야에서는 지난해 중점과제인 인민생활 향상과 첨단과 학기술편야의 성과를 강조하였음.
-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산업부문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 정상화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음.
- 지난해 북한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주체섬유 생산, 남흥 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주체비료 생산,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생산 등을 주요 성과로 선전하였으며, 김정일 위원장도 해당 기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음.)
- 신년사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련관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졌다”고 언급함.

1)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2009년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이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로 규정하였음(『로동신문』, 2010. 1. 1).

2) 최근 몇 년간 김정일의 주요 기업소 현지지도를 살펴보면,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6회(2007년 8월, 2008년 5월, 2009년 2월, 2010년 2월과 8월), 락원기계연합기업소는 5회(2008년 11월, 2009년 2월과 9월, 2010년 1월과 6월),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5회(2007년 8월, 2009년 2월과 12월, 2010년 3월과 12월) 각각 방문했음(『조선신보』, 2010. 12. 23).

- 북한은 지난해에도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국방력 강화라는 선군시대 발전전략을 고수하였음.
- 신년사에서 “최첨단돌파전의 불길드높이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인재양성의 전당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변되었다” 고 주장함.
- 대남 및 대외관계에서는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따른 긴장된 정세에 대한 지적과 함께 김정일의 지도력을 강조하였음.
- 신년사에서는 “지난해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극도로 긴장된 정세와 적들의 악랄한 제재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사상은 공격사상이며 당의 혁명방식도 공격방식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고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였고 전군, 전민을 대담한 공격전으로 이끄신 장군님의 령도예술은 참으로 비범하고 령활하였다” 고 언급함.
- 또한 신년사는 이례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였는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차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력사적인 장정이였다” 고 언급함으로써 지난해 북·중 관계의 중요성과 향후 북·중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음.
- 신년사에 나타난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부문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발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됨.
- 신년사에서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다” 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경공업, 특히 소비품 생산 증대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농업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우선순위가 내려갔지만,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이다” 라면서 식량증산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가적 투자의 확대를 강조하였음.
-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통한 “최첨단 돌파전을 계속 심화” 시켜나가기야 하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음.
- 특히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 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 시켜야 한다고 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 대외경제관계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강조하였음.
- 신년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 해나가기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2011년 북·중 경협에서 북한의 자원개발을 매개로 한 협력프로젝트의 구체화와 석탄 등 지하자원의 수출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치·군사 부문에서는 당대표자회 이후 확립된 당의 영도체계 강화와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이 중점과제로 제기되었음.
- 특히, 신년사에서는 “정치,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를 강조함.
- 한편 각급 당조직들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우리식 사회주의사상’의 교양 강화도 강조되었는데, 이는 러한 사상교양 및 대중운동의 강조를 통해 북한 당국이 후계체제를 비롯하여 경제강국 진입,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 비핵화 및 6자회담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 내부적 혼란을 방지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남·북 관계 긴장과 북·미 관계 악화 등 전반적 대외환경의 악화를 반영하여 군대를 통한 체제수호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
- 특히 “우리의 존엄과 제도, 하늘·땅·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역사적 사명을 기어이 수행할 것” 임을 강조하여, 대남 무력도발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음.
- 신년사에서는 올해의 대남 관련 구호로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지” 를 제시하였음.

-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을 여전히 강조하는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인 실현을 제시하였음.
- 한편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입장과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였음.

- 북한은 2009년 말에 단행한 화폐개혁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식량 및 생활소비품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추진하였음.
- 이는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북한 주민들이 느껴야 2012년까지 강성대국 대문을 연다는 자신들의 경제목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영의 후계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도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

표 2. 2010년 및 2011년 신년공동사설 주요 내용 비교

분야	2010년	2011년
정치·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과 당조직들의 역할 강화, 사상교양 사업 강화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당의 의도 구현 촉구 • 군민일치 강조, 군인건설 사업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영도적 역할, 당조직 강화 • 당대표자회 정신 강조 • 인민군대의 전투적 위력 화, 당정치사업 심화, 민단결, 무자비한 섬멸전 등 강조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구현 • 인민생활 향상은 김일성 유훈 관철을 위한 당의 정치적 사업 • 전체 인민의 사회주의 혜택 향유를 위해 인민적 시책 철저 구현 • 4대 선행부문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힘 있게 추진 •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경제원칙 관철 및 사회주의경제 우월성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 해로 구현 •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 • 4대 선행부문은 인민생활 대고조 불길의 '밀밭', 화학공업기지 생산 정상화 강조 • 농업은 인민생활 문제 결의 생명선 • 자력갱생 원칙 철저 구현
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입장 강조 • 화해도모, 내왕과 접촉을 통한 협력사업 추동 • 공리공영 장애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 자유로운 통일논의 및 활동 보장 •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 종족대결정책 철폐 △ '6.15·10.4 선언 이행 △ 반전·평화·반외세 투쟁 선동 • 북침전쟁연습, 무력증강 중단 요구 • '대화과 협력사업' 적극 추진(내왕·교류 보장 및 협력사업 장려) • 남북공동선언 및 '우리민족끼리' 이념 강조
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적대관계 종식으로 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 보장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 및 비핵화 실현 • 자주·평화·친선의 기본 외교 노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평화 및 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 자주·평화·친선의 기본 외교 노선 유지

자료: 통일부 2011년 신년사 분석 자료

2. 2010년 북한경제 평가

■ 2010년도 북한경제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연초 신년사설 및 4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였음.

- 둘째,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 정상화와 시장에 대한 통제도 계속 강화해왔음.
 - 북한 경제조직사업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계획규율, 재정규율, 노동행정규율 등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음.
 - 특히 지난해 4월 김영일 총리의 최고인민회의 사업보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2009년의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
 - 이는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체제의 안정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부문의 정상화 및 인민생활의 향상과 함께 주민들의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시장의존세력을 약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화폐개혁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통제 정책에서 일부 후퇴하거나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시장을 약화시키고 계획경제를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국방력 강화라는 선군시대 발전전략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경제의 비약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첨단돌파' 임을 강조해왔음.

- 북한의 주요 매체들도 △ 주체철 생산체계의 완성 △ 비날론의 생산정상화 △ 생산현장의 CNC화 △ 우주기술과 핵기술 △ 생물공학 발전 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첨단과학기술 발전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

- 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넷째, 북한은 외자유치를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북·중 경협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09년 10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이후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라선시에 대한 개방조치와 대외자본 유치를 위한 기구(국가개발은행, 대풍그룹 등)를 창설하였음.
 - 단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정상화나 산업생산 가동률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은 가운데,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은 중국의 지원이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특히, 북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3월 천안함 사건에 따른 한국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경협이 위축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음.
 - 그 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북·중 경협은 더욱 확대되었음.
 - 북·중 무역은 2010년 1~11월까지 30억 5,655만 달러로 이미 2009년의 무역총액(26억 8,100만 달러)을 넘어섰음.
 -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무역규모도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3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대북투자도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정부는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북·중 경협의 활성화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경제현안 해결 및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북한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경제 상황은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지 못하였음.
- 북한경제는 여전히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연평균 2~3%대의 낮은 성장률에 머무르고 있고, 매년 150만 톤 내외의 식량부족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이 2008년도에는 3.7%를 기록했지만, 2009년에는 -0.9%에 머물렀음.
 - 2010년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 경협 위축에도 불구하고 북·중 경협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3% 내외의 저성장률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 대외경제 부문도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경협이 위축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북·중 무역은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80%(남북교역 포함 시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 3. 2011년 북한경제정책의 특징
- 2011년 북한경제의 목표는 후계체제의 조기 안정과 2012년 경제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후계자를 공식화한 북으로는 2012년까지 인민경제 생활 향상과 대외경제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2012년 경제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1년에 인민생활 향상과 주요 산업의 정상화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함.
 - 또한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공식화된 후계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경제부문의 높은 실적이 필요함.
 - 따라서 2011년을 포함해서 향후 2~3년이 북한에서는 경제 부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과 후계체제 조기 안정화의 관건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제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인민생활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생산증대 여부임.

- 북한은 2010년에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및 농업부문의 증산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의 총공격전은 거창한 인민생활 향상 대진군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우리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르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투철한 립장이다” 고 강조하였음.
- 특히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고 언급한 부분은 인민생활필품과 관련된 경공업부문이 2011년 경제부문의 핵심과제라는 것을 의미함.
- 경공업부문의 생산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 경공업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 △ 소비자 수요 충족 △ 경공업의 현대화와 과학화 △ 지방공업의 발전 △ 경공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원료·자재의 주체화와 국산화 등이 신년사에서 제시되었음.
- 북한은 지난 수년간 공장 및 기업소의 설비 현대화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섬유류 및 신발 공장들의 현대화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³⁾
- 북한은 올해에도 경공업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의 비중 확대를 통해 생산공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방공장의 역할을 제고시켜나갈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지방단위의 경공업 공장 가동률 제고를 위해 전기와 원자재 보장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적극 수립해나갈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공업부문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인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외국인 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산과 함께 제품의 질 제고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수년 전부터 “우리의 경공업제품의 양이 적고 질이 낮으면 다른 나라 상품들이 우리의 시장에 밀려들게 된다”면서 중국산 제품의 북한 시장 장악을 우려하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민소비품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왔음.
- 생산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 기술갱신 △ 생산의 전문화 △ 기술공정 준수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소비자의 수요에 기초한 상품생산을 위해 생산계획부터 인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장 및 기업소들이 단지 양적 지표의 계획 달성이 아닌 소비자의 선호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방침 등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축산양어·과일생산 기지들을 건설하여 농업부문의 다각화를 통한 경제성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당국은 농업생산의 과학화·기계화·화학화 수단의 효과적 이용, 복잡한 영농기술공정의 과학적 조직 지도, 위성정보에 의한 농업기술 도입에 필요한 연구사업,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중심의 첨단기술에 의한 농업기술체계 개진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경공업 및 농업 증산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은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체제의 정당성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였음.
- 둘째, 2011년에도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첨단돌파임을 강조함에 따라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정책적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됨.
- 2000년대 이후 북의 자력갱생은 이전과 달리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되어 경제의 자립성 및 현대화 강화, 생산증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첨단과학기술 발전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며, 최근 들어 북이 ‘주체철 생산’, ‘CNC 기술’, ‘주체비료’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

3) “올해 조선에서는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마련되었다.” 『조선신보』, 2010. 12. 25.

은 맥락임.

- 따라서 북은 2011년에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현대화과학화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공장 및 기업소 등의 생산현장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올해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부위원장이 북한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직접 지휘함으로써 ‘선군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할 가능성이 높음.
- 이로 인해 북한이 올해 안에 3차 핵실험을 비롯하여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발전소 등 핵 관련 기술개발 및 시설건립에 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셋째, 철강·화학·기계공업 등 일부 핵심 산업의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 등 소위 선행부문의 정상화에 주력해왔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경제난 당시 가동이 중단되었던 주요 기간산업의 공장과 기업소들이 지난해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음.
- 최근 북한이 김책제철소, 2·8 비날론연합기업소 등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특히, 해당 공장들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에도 현지지도로 계속함으로써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설비, 재원 및 인력 등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됨.⁴⁾
- 해당 부문이 산업 전반의 전후방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 발전과 자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행부문을 비롯한 기초산업의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4대 선행부문 또는 핵심 기초산업들이 2009년

까지 국방공업의 발전과 경제전반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시되던 것과는 달리, 지난해부터 ‘인민생활 향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북한 당국은 4대 선행부문이나 기초공업 중에서도 경공업 및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부문(경공업 설비, 농기계 등)에 대해 우선적인 투자를 보장해나갈 것으로 보임.
- 올해 신년사에서 석탄생산 증대가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었는데, 이는 석탄생산 증가를 통한 비료(주체비료)와 섬유(주체 섬유) 그리고 전력 증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⁵⁾
- 또한 신년사에서 화학공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화학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통해서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 농약 생산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넷째, 올해 북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특히 북·중 경협 확대임.

- 자체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외부의 지원과 경제협력이 절실함.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 등을 감안할 때 북·중 경협 확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음.
- 지난해 북한이 후계체제 공식화 이전에 2회에 걸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공고히 한 것도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지지는 물론, 대규모 경제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임.
-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3월 천안함 사건에 따른 한국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경협이 위축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음.
- 한편 최근 북·중 경협 확대는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연결되어 있음.
-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추진과 북·중 경협 확대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특별시 개발임.
-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말에 라선지역을 현지지도하고,

4)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2010년도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횟수가 158건(2010년 12월 22일 현재)인데, 이 중 71건이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였음. 특히 김책제철소, 남흥화학기업소, 2.8비날론기업소 등 핵심 생산현장들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음.

5) 지난해 신년사에서 “강제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계도 나온다”고 역설한 데 반해, 올해 신년사에서는 “석탄이 팡팡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고 주장함.

2010년 1월에는 이 지역을 특별시로 지정하면서 경제무역 지대법을 개정한 것도 향후 본격적인 개발과 대외개방을 대비한 조치로 보임.

- 2011년부터 라선지역을 중심으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
- 또한 북·중 양국은 2010년 12월 31일 신압록강대교 건설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신의주의 황금평 및 위화도 개발도 2011년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4. 2011년 북한경제 전망

■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 거시경제 성장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보다 훨씬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저성장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경제 발전의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음.

- 대내적 요인은 △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보수적 정책기조 유지와 사상통제 강화 △ 계획경제 강화 및 시장통제 확대 △ 낮은 산업가동률 △ 열악한 산업인프라 등임.
- 대외적 요인으로는 △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지속 △ 남·북 관계 경색과 남북경협 위축 △ 저조한 외국인투자 유치 △ 국제사회의 지원 제한·중단 등을 들 수 있음.

■ 북한이 2011년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경공업, 농업 활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도 그 성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선군발전전략에 따른 국방공업 및 중공업 중시노선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북한 당국이 목표로 내세운 바와 같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기존의 국방공업과 중공업 우선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경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방공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과 물자투입에서 벗어나 경공업 중심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

-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 전례없이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에도 예산비중을 올린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경제의 근간은 국방공업과 중화학공업부문임.

○ 2011년도 예산안에서도 경공업 농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10% 정도 늘어나지만, 절대 규모에서는 중화학공업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여전히 국가예산의 절대적 비중이 국방공업과 중화학공업 부문에 투입되고 있음.

○ 이는 핵문제와 북·미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군수부문에 대한 자원과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 결국 경공업과 농업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 효과는 선군정치 및 선군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당국은 최근들어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외자유치와 대외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자유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

-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 경협도 정체 내지는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유일한 외자유치 또는 경제협력 대상국은 사실상 중국밖에 없음.

○ 따라서 2011년에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는 한편, 양국의 접경지역과 북한의 일부 항구도시(라선 선봉, 청진, 원산, 남포 등)를 중심으로 한 경협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중 경협 확대는 북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제재로 인한 여타 국가들과의 경협 위축은

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게다가 북한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경제협력만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움.
- 또한 중국의 대북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북·중 경협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 효과도 제한적임.

- 북한이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일부 생산 현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가들과 교류협력이 제한됨으로써 일부 군수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제 경쟁력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음.
- 또한 과학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체 자원부족 및 인력양성 한계,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올해에도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 개발 및 첨단산업 발전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체의 노력만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경제개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KIEP**